

노동부는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 대책위는 민관 합동 조사 촉구

✎ 이재준 기자 | © 승인 2022.02.18 17:48



지난 14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발사고 공동조사단 구성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천NC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최금암·김재을 공동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보 자료 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여천NCC는 삼표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본사와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고 원인 조사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까지 중대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대응체계와 특별감독에 일방적인 결과발표가 아닌 진실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9시 30분 경 여수에 위치한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책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조사단 구성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국가산단의 안전 국가 책임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재준 기자 crrnwns@hanmail.net